KNSI 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 제142호

타이 민주주의의 탈민주화, 그 아시아적 함의

박은홍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Ⅰ. '타이식 민주주의'로의 회귀
Ⅱ. 군정체제하에서 부활한 '탁시노크라시'
Ⅲ. 시민사회 대 시민사회,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Ⅳ. 탈민주화의 재민주화를 위한 조건

Ⅰ. '타이식 민주주의'로의 회귀

현 민주당 정부를 반대하는 '반독재민주주의전선'의 강력한 물리적 저항으로 무정부적 상황을 방불케 했던 혼돈이 일단락되었지만, 수도 방콕 일대 비상사태령이 해제되자마자 탁신을 지지하는 반정부세력들의 집회가 다시 시작되었다. 지난 3월말부터 격화되기 시작 마침내 'ASEAN+3' 정상회담을 무산시킨 '반독재민주주의전선'이라 불리우는 이들 반정부시위대의 요구는 현 민주당 주도 내각의 해산과 총선, 2006년 쿠데타의 배후 인물이라고 보는 국왕의 측근 쁘렘 추밀원 원장의 퇴진, 나아가 2006년 쿠데타 이전 '1997년 헌정체제'로의 복귀이다.

타이에서는 1932년부터 1992년까지 60년 동안 총 열일곱 번의 쿠데타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 열 번은 성공하였고 일곱 번은 실패하는 등 사실상 근대화 기간의 대부분을 군부통치하에서 보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정치적 자유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면서 이후 군부의 지위가 약화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1992년 민주화 이후 군부는 정치무대 전면에서 퇴장하였다. 그러나 2006년 9월 열여덟 번째 쿠데타가 성공을 거두고 군정이 들어서면서 민주주의의 공고화까지 내다보았던 타이 민주주의는 급속하게 퇴행하기 시작했다.

타이는 경제적 위기 없이 민주화가 진행된 이른바 '위기 없는 이행'의 대표적 사례였다. 한때 군정을 정당화하는 입헌군주제를 넘어서고자 하는 급진적인 정치투쟁이 있었지만 실패하였다.

타이 정치에서 국왕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타이에서 국왕은 지존의 존재이며 어느 누구도 국왕의 지위를 침해할 수 없다. 국왕은 종교의 수호자이자 군 통수권자이다. 이를 테면 민주화세력이 '안전밸브'에 해당하는 왕실에 도전하였을 때 국왕은 군부와의 제휴를 통해 현상유지에 성공하였다. 1976년 10월에 왕권수호를 기치로 단행했던 유혈 쿠데타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한편 군부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이 추락하거나 부재하여 시민사회의 도전이 대규모화하였을 때 국왕은 시민사회와 군부간의 타협을 중재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적지 않은 타이 지식인들이 타이 사회가 비교적 안정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를 국왕의 존재에서 찾는다.

Ⅱ. 군정체제하에서 부활한 '탁시노크라시'

타이 민주주의는 '국민헌법'으로까지도 일컬어진 1997년 신헌법이 제정되자 공고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시민사회 주도로 이루어진 신헌법에 대해 보수적 각료들과 의원들은 "공산주의자들의 획책", "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렇듯 보수진영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신헌법은 1997년 7월에 발생한 금융위기를 계기로 개혁 담론이 급부상하면서 뜻밖에도 신속하게 통과되었다. 이 헌법을 계기로 부정축재에 대한 조사발의, 민선 상원 구성,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등과 같은 독립기관 설치 등이 가능해졌다. 특히 사상과 정치활동을 제약하던 반공법이 폐지되었다. 이로써 타이의 시민사회는 국왕과 왕실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997년 헌정체제는 정반대의 결과를 수반하였다. 1997년 헌정체제의 첫 결실로 민선수상으로 전무후무한 권력을 쥐게 된 탁신과 절대의석을 갖게 된 그의 타이애국당이 '행정독재', '의회독재'를 일삼다가 결국 방콕시민들의 탄핵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탁신의 포퓰리즘의 수혜지역이었던 북부와 동북부지역은 탁신에 대한 거부감이 증폭되고 있는 '방콕 정치'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2006년 탁신은 사실상 자진 사임을 거부하고 신임여부를 묻는 총선 실시를 제안했다. 그러나 총선이 탁신에게 유리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반탁신 진영은 그의 제안을 거부하고 '직접행동'으로 맞섰다. 이때 반탁신운동 지도부는 국왕이 직접 새로운 수상을 임명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국왕은 이를 거절하였다. 결국 양 세력의 극단적 대치는 왕권 수호를 기치로 내건 군부 쿠데타를 불렀고, 반탁신진영은 이를 '좋은 쿠데타'로 받아들였다. 군부는 약속대로 새로이 만든 헌법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 반탁신 쿠데타에 대한 거부감을 보여주는 57%라는 저조한 지지율로 통과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2007년 신헌법이 통과되고 군정 하에서 치러진 총선에서도 탁신의 후계세력인 피플파워당이 농촌 지역의 절대적 지지를 다시 받아 최다 득표를 함으로써 사실상 탁신세력은 부활하였다. 특히 탁신으로서는 명예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맞서 반탁신 민주주의민중연대는 군부와 왕실의 지지를 등에 업고 피플파워당의 집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종합청사 '점거투쟁'에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반쿠데타-친탁신의 성향을 지닌 반독재민주주의전선과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수개월 동안 점거투쟁을 벌인 반탁신세력은 2008년 12월 피플파워당의 집권을 종식시키고 민주당의 집권을 성사시켰다.

Ⅲ. 시민사회 대 시민사회,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초기 탁신의 포퓰리즘은 일부 사회운동진영까지 포섭해냈다. 집권 타이애국당에서 당과 진보진영간의 소통 역할을 맡은 사회운동가 출신의 분탐은 자본주의란 자동적으로 빈곤층을 착취하는 체제라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인 구 좌파적 발상으로서, 오히려 탁신정부야말로 대중에 직접 다가가 자본주의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공동체경제가 같이 갈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고 있다며 자당의 노선을 옹호하였다. 이른바 '탁시노믹스'는 경쟁력 있는 경제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국내자본을 보호하고, 민영화와 같은 시장지향적 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빈민 등 사회적 약자계층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복합형 개발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2005년 총선에서 탁신의 타이애국당이 절대 의석을 확보하여 재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그러나 재집권 이후 탁신의 독주가 심해지고 비판적인 시민사회조직들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노골화된 데다가 그의 포퓰리즘이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의 타협지점을 점차 확대하자 개혁 성향의 지식인들과 활동가들이 탁신진영을 떠나기 시작했다. 특히 탁신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잇달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는 농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여기에다가 2006년 1월 탁신 일가가 법망을 교묘히 피해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자신들의 주식을 외국에 팔아넘긴 약삭빠른 행각에 방콕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였다. 같은 2월에 반탁신 대규모 시위가 있은 직후 1992년 민주화 시위를 이끈 주역 중의 하나였던 민중민주주의운동(CPD)의 사무처장 수리야사이는 탁신을 축출하기 위해 학계, 재계, 농민, 도시빈민, NGO, 노동자, 학생 등을 대표하는 40개 조직이 '민주주의민중연대'를 결성하였음을 공식 선언하였다.

반면 같은 해 3월 초 전국 각지에서 올라 온 지방민들과 일부 방콕시민들은 탁신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 대부분은 농민, 소상인, 모토사이클 택시기사 들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들을 무지하거나 속았거나 매수당한 것으로 폄하하였지만 이들의 탁신에 대한

지지 입장은 명확했다. 탁신이야말로 서민을 위한 30바트 보건 프로그램, 100만 바트 지역사회 개발기금 프로그램, 농가채무변제 유예 등을 추진한 개혁적 정치인이라는 것이다. 설사 탁신과 그의 정부가 부패했다고 치더라도 대부분의 역대 수상들도 모두 부패했다는 것이다.

탁신을 지지하는 지식인들은 반탁신과 친탁신의 대립은 전근대적 후원체제 대 민주주의 대립으로 보았다. 이들에게는 탁신에 대한 대중적 지지도 진실이고 탁신의 농촌 중심의 친(親)빈곤정책도 진실이다. 반면 반탁신 민주주의민중연대의 지도부는 탁신이 농촌 문제를 의제화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나 그의 포퓰리즘은 농민의 생활개선을 진정으로 원했다기보다는 단지 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그들은 표를 통해 탁신을 몰아낼 수 없자 쿠데타까지 용인하였다.

그렇지만 사실상 반탁신 진영이 불러들인 2006년 쿠데타 이후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은 다시 커졌다. 군부와 왕실 관계도 보다 확고해졌다. 군부와 왕실은 1950년대 말부터 돈독한 관계를 갖기 시작했다. 특히 1980년대 쁘렘 수상 시절에 국왕의 지위는 일층 격상되었다. 국왕은 왕실자문기구인 추밀원에 전직 군 수뇌들을 임명하였다. 2006년 쿠데타 이후 군과 왕실에 인연을 맺고 있던 보수주의자들이 공직에 임명되었다. 군부가 임명한 의회는 2007년도 군 예산을 50% 증액시켰다. 군부는 공직자에 대한 정화작업을 벌이고 지방행정의 중요 자리에 군 장교를 임명하였다. 공직 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이름하에 분권화를 후퇴시켰다. 2007년 신헌법에 따라 민정이양이 이루어졌지만,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실제 쿠데타 이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기 시작했다. 2006년 9월 19일 쿠데타를 승인한 국왕에 대해 비판적인 일부 청년들은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왕실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정부당국은 이들에게 최고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왕실모독죄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실을 비난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예전에 볼 수 없을 만큼 증가하자, 급기야 정부당국은 왕실을 모독한 2,300개의 사이트를 폐쇄하였다. 2008년에는 저명한 원로 사회운동가인 술락 시와락이 왕실모독죄로 입건되었다. 왕립 쭐라롱껀대 짜이 응빠껀 교수도 왕실을 비난한 저서를 발간했다는 이유로 입건되자 영국으로 피신하였다.

Ⅳ. 탈민주화의 재민주화를 위한 조건

탁신 지지에 나선 사회운동진영은 '탁시노믹스'의 케인즈주의적 성격과 그가 갖는

절차적 정당성에 주목한다. 그리고 탁신에 대한 증오가 쿠데타에 대한 관용으로 이어진, 그래서 최소한의 민주주의의 규칙을 무시해버린 대다수 타이 지식인들을 '탱크 리버럴'이라고 비난한다. 나아가 탁신 지지세력 중에는 극히 일부이지만 근대적 부르주아지의 포퓰리즘을 등에 업고 아예 전근대적 '국가 가부장주의'를 전복하겠다는 공화주의자도 있다. 그러기에 일각에서는 지금의 대치구도를 봉건주의 대 자본주의로 보기도 한다. 또 무장투쟁까지 선동한다. 그러나 이들은 탁신 스스로가 또다른 절대권력자로서 '아시아적 가치'와 '아시아적 민주주의'를 정당화하였던 제2의 마하티르를 꿈꾸었음을, 또 반탁신세력이 제기하는 탁신의 윤리적 하자에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흥미롭게도 지구화의 수용과 사회적 약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다분히 상충되는 두 개의 트랙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였던, 이른바 '사회적 신자유주의'(social neo-liberalism)에 가까운 탁신의 포퓰리즘과,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를 경험한 필리핀에서의 에스트라다의 포퓰리즘은 각각 부패행각이 드러나면서 시민운동에 의해 전복되었다. 주목할 것은 탁신과 에스트라다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에 과거 과두지배세력들의 암묵적 지지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필리핀의 경우 에스트라다의 퇴진에 따른 기층계급의 좌절은 '폭도 민주주의'(mob democracy)의 양상으로 표출되었다. 타이에서도 갈등의 해결방식을 제도화한 민주주의 규칙에 대한 반탁신세력의 부정이 탁신 지지세력을 필리핀의 에스트라다 지지세력과 유사한 '직접행동'으로 이끌고 있다. 물론 이들의 '폭도 민주주의' 양상은 신생민주주의의 비자유주의적 경향을 보다 강화시키고 있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타이와 같은 신생민주주의의 사례는 최소한의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지적·실천적 합의, 시민사회의 독립성, 사회적 약자계층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대안적 대중정당이 없이는 민주주의의 공고화는커녕 탈민주화(de-democratization)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9/04/27)

※코리아연구원은 회원님들의 정성어린 후원회비 및 기부금으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 부문에서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을 제시합니다. 홈페이지(www.knsi.org)와 전화(02-733-3348)로 후원 및 회원등록이 가능하며, 후원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